

더민주 당권주자들 표심 잡기 전쟁 돌입

제주서 합동연설회 시작... 13일 광주·전북, 16일 전남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9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민주 제주도당 합동연설회에서 김상곤 후보는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을 찾아오려면 우리 당이 임청 강해야 한다”며 “보수 진영이 파놓은 계파의 멍에 빠지면 안 된다.

계파에 기댄다는 것은 당의 대선 후보 확장성을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선 6개월 전 경선을 마무리하고 대선 후보와 함께 예비내각을 만들어 국정 전략을 국민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후보는 “저를 포함해 정권교체를 못 이룬다면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포함한 어떤 각오도 해야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합과 화합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대통령 라운드”를 만들어 모든 것을 통합하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내는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전대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주류가 되고 패자가 비주류가 되는 분열의 정치를, 모두 주류가 되는 통합의 정치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

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도록 국무위원을 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당헌에 못 박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제주와 경남을 시작으로 오는 11일 울산과 부산, 12일 대구와 경북, 13일 전북과 광주, 16일 전남, 17일 충북과 강원, 19일 충남과 세종, 20일 서울과 인천, 21일 경기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한 뒤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野의원 매국노 매도...대통령 맞나”

더민주 '사드 방중' 논란 반격...박대통령 사과 요구

일부 초선의원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중' 논란으로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지금까지의 대응 수준에 머물렀다가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적극적인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방중 의원들의 귀국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귀국 보고가 이뤄지는 의총은 여권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중 논란과 사드 반대 당론 채택 문제 등이 겹치면서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방중 의원들의 귀국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귀국 보고가 이뤄지는 의총은 여권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중 논란과 사드 반대 당론 채택 문제 등이 겹치면서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야당 의원들을 매국노, 북한 동조세력으로 만드는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단체장의 사드 관련 방중에는 왜 침묵했느냐. 그것도 매국노, 사대주의, 북한 동조였느냐”며 “이렇게 해놓고 야당 협조를 부탁하느냐”면서 박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다.

사드 방중 논란에 침묵했던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격의 대열에 합류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했다”며 “그 때 박 대통령의 마음과 지금 방중한 야당의 의원들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간 잠시 접어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카드를 다시 꺼내두고 여권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드 방중으로 수세에 몰렸던 더민주가 국면전환을 위해 총공세에 나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귀국 보고가 이뤄지는 의총은 여권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중 논란과 사드 반대 당론 채택 문제 등이 겹치면서 노선 투쟁의 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드 방중 논란에 침묵했던 문재인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격의 대열에 합류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도리어 노력하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비난부터 하니 참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석했다”며 “그 때 박 대통령의 마음과 지금 방중한 야당의 의원들의 마음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간 잠시 접어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박지원 “사드 방중, 애국 대 매국 프레임 위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군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설득하지 않으면서 중국 비판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사드 문제를 ‘애국 대 매국’, ‘안보 대 총북’, ‘중국 대 미국’ 중 선택하라는 국내정치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여야 전대 흥행에 불안감

의총 개최...전략회의 가동·지역조직 강화 등 주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에 국민의당이 미묘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9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대 이후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아직도 당의 체제 정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정현 돌풍과 비박(비 박근혜) 후보 단일화로, 더민주는 컷오프에서의 송영길 후보 탈락이라는 이변으로 예상 밖의 흥행을 일으키면서 국민의당이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초조함도 드러났다.

보내 대선을 앞두고 지역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아무 연구도 없고 당선 가능성도 낮은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는 것은 설익은 주장”이라며 반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 내외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본격적인 영남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남은 이미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영남 공략에 나서, 정치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에 원하는 호남의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안 전 대표의 영남 지지세 확산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안 전 대표 지지층이었던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당 차원의 젊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하고 내년 국방 부문을 비롯해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인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립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 부문의 예산을 상당폭 증액하되 지금까지 논농사 중심이었던 것을 밭농사 위주로 전환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경쟁력 약화에 대비하고 농로 확보나 수리시설 개선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국방부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도록 배정하기로 했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데 합의했다.

내년 국방·청년 일자리 예산 증액

예산 편성 첫 당정협의회

또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올해 2만원 오른 2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상당폭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우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당 지도부는 복지전달 체계, 공기업 구조조정, R&D 예산 등과 관련해서는 중북·과잉 투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 홍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추가 결정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면서 조속한 국회 심사를 야당 측에 촉구했다. 그는 특히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을 언급한 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미리 준비해서) 다른 예산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野 ‘전기료 누진제 개편’ 압박

더민주 법안 발의...국민의당도 단계 조정안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전기료 폭탄’을 우려, 전기료 누진제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누진 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도 단계 조정안 제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 4.7% ~ 4.9%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